
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

2018. 2. 1.



/대/통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

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
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
환경부, 여성가족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

◆ 수립배경

정부는 '17.7월 「국정운영 5개년 계획」에 따라
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'**고르게 발전하는 지역**'을 정하고,
4대 복합·혁신과제 중 하나로 '**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
자치분권과 균형발전**'을 선정하는 등
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

전 국토면적의 12%인 수도권에
인구의 50%, 1,000대 기업 본사의 74%가 밀집된 상황에서,
중앙 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을 지속해서는
저성장, 양극화, 저출산, 고령화, 지방소멸 등
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

이에 **분권, 포용, 혁신**의 가치를 기반으로
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통해,
지역이 국가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
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힘껏
도약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.

◆ 수립경과

문재인정부 「**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**」은 ① **전문가**
② **지자체** ③ **지역주민** ④ **중앙부처**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
거쳐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지혜를 담아 수립되었습니다.

- ▶ 국가균형발전 전문가 T/F 회의 및 워크숍 ('17.6월~ 총 20여회)
- ▶ 지자체 권역별 토론회 및 의견 청취 ('17.9월~ 총 8회)
- ▶ 국민제안 공모제('17.9~11월), 대국민 인식조사('18.1월)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

목 차

I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	1
II.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	4
III.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	7
IV. 전략별 주요과제	8
1. [사람]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	9
2. [공간]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	15
3. [산업]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	22
V. 실행력 제고방안	30
VI. 향후 추진일정	3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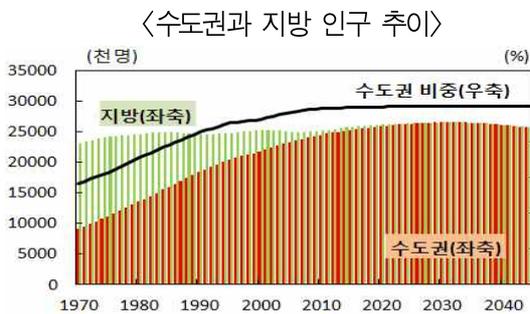
I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

1 통계로 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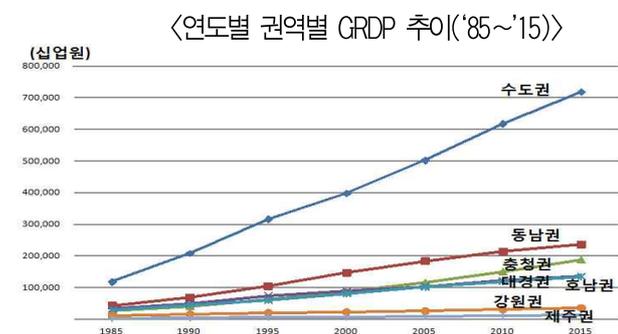
- 수도권은 인구의 49.5%('15년, 통계청), 1,000대 기업 본사의 73.6%('16년, 부산상의),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.8%가 분포('17.11월, 통계청)
- '00년 이후 비수도권 GRDP 증가율*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하회, 지방세의 54.5%, 국세**의 55.1%가 수도권에 집중

* ('00~'10년) 수도권 4.5% > 비수도권 4.1% / ('11~'15년) 수도권 3.1% > 비수도권 2.8%

** (수도권 비중) 법인세 58.5%, 종합소득세 56.6%, 종합부동산세 79.1%



자료: '17년, 통계청, 장래추계인구



자료: 통계청

-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%가 수도권에 집중('15년, 한은), 부동산 가격도 지방중소도시는 수도권 대비 약 55% 수준*('17년, 통계청)

* (수도권 100 기준) 서울 148,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71, 지방중소도시 55

-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*(접근성 하위 20%)의 대부분(92.5%)이 지방에 위치

* 보건복지, 생활서비스, 교육, 문화여가, 생활안전시설 등의 접근성을 기준('16년, 농경연)

- 226개 기초지자체 중 34개는 응급의료기관 전무(이중 22개가 비수도권), 34개는 1시간내 분만가능 의료기관 부재 등 의료여건 취약('17년, 복지부)

- 지방 학생 수 감소로 지역의 폐교 비율*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높음

* 폐교 비율 : 전남(21.9%), 경북(19.1%), 경남(15.2%), 수도권(1.8%)('16년, 교육부)

- 전시건수의 55.5%, 공연예술 횟수의 65.4%가 수도권 집중('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)

2 지역문제의 새로운 양상

① 저성장·양극화 심화

-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경제성장률 둔화 및 저성장 고착화
 - * 연평균 경제성장률(한국은행) : ('91~'00년) 7.0% → ('01~'10년) 4.4% → ('11~'17년) 3.0%
- 가계-기업 및 가계 간 소득 격차* 확대로 양극화 심화('15년, 한국은행)
 - * 1분위(하위10%) 대비 10분위(상위10%) 임금근로소득배율: ('06년) 11배 → ('15년) 14.8배
-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기업이전 집중 등 국토공간도 양극화
 - * 지방이전 기업('12~'16년)의 60.5%가 수도권 인접지역(충청권·강원권)으로 이전

② '인구절벽' 쇼크와 '지방소멸' 위기

-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*로 '인구절벽' 쇼크 현실화 우려
 - * '16년 1.17명 (프랑스 2.0명, 미국 1.9명, 일본 1.4명)
-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%(85개)가 소멸* 위기('16년, 한국고용정보원)
 - * 소멸위험지수(20-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)가 0.5 미만지역

③ 지역산업 위기, 4차 산업혁명 대응 여력 부족

- 지역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기 침체
 - * (예시) 거제, 통영, 울산 등 조선밀집지역 소상공인 경기 악화 및 조선업 종사자 감소 ('15년말 18만 8천명 → '17.11월 11만 5천명)
- 수도권과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수용능력 격차가 현저하여 지역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쇠퇴시 경제력 격차 심화 전망
 - * 4차 산업혁명 수용능력 순위 : 경기 7.4(1위), 서울 6.0(2위) > 제주 -1.8(14위), 전남 -1.8(15위), 울산 -2.5(16위) ('17년, 국토연구원)

[평가] ▶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(저성장·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, 지방소멸 등) 극복과 시대적 흐름(4차 산업혁명, 지역산업 위기 등) 대응이라는 과제 직면

👉 **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필요**

3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동향

① (일본) 인구감소, 고령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비전 수립

- (정책) 총리직속 내각관방에 마을·사람·일 창생본부 설치('14.9월)
 - * 일자리·사람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'마을·사람·일 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' 수립('14.12월, '15년부터 5개년)
- (시사점) 인구감소, 저성장 대응을 위해 총리가 주도하여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자체 적극 지원(인재·정보·재정 등)

② (프랑스) 계획계약제도 시행, 재정력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

- (정책) 지자체대표(지자체장, 지역의회 의장 등)와 국가대표(지역지사)간 계약 및 지역별 차등지원에 기반한 제6차 계획계약제도* 시행('15~20년)
 - * Contrats de plan : 국가-지역간 공동사업에 대해 재정투자 등을 약속하고 일정기간(5~7년)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('82년 지방분권 이후 '84년부터 시행)
- (시사점) 사업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되 중앙-지역간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

③ (영국) 분권형 지역발전 정책 지속 추진

- (정책) 지역민관협의체(LEP)*-중앙정부간 협상을 통해 지원사업·규모를 결정하는 지역성장협상(Local Growth Deal)·분권협상(Devolution Deal) 도입('14년)
 - * LEP : Local Enterprise Partnership(지자체-지역기업 협의체)
 - 협상근거가 되는 지방주권법('11년), 도시 및 지방분권법('16년) 제정
- (시사점) 지역발전 권한·재원의 대폭 지방 이양 및 지역 자율성 강화

[평가] ▷ 일본은 인구감소, 고령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
▷ 프랑스·영국은 계획계약·포괄지원협약제도, 분권협상 등 분권형 지역정책 추진

☞ 선진국들은 경제성장, 사회통합을 위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중

Ⅱ.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

1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

① 참여정부 ('03~'07년)

- (성과) 세종시·혁신도시 건설,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간적 분산 정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
 - *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('03.4월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·운영('04.1월) 등
- (한계) 이전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집중,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다소 미흡

② 이명박정부 ('08~'12년)

- (성과) 5+2광역경제권*으로 분산·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시·도 경계를 넘는 광역 현안 해결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도
 - * 16개 시·도를 5대 광역경제권(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동남권, 대경권)과 2대 특별 광역경제권(강원권, 제주권)으로 개편
- (한계) 세종시 수정안 논란,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, 정책조정기구 약화*로 추진동력 약화
 - *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사전조정 의견권한 약화,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기능 부실 등

③ 박근혜정부 ('13~'17.5월)

- (성과) 시·군·구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였고, 새뜰마을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* 등 시행
 - * 의료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(광주-나주-담양-화순-장성-함평), 분만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구축(춘천-화천-홍천-양구),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시설(속초-고성-양양) 등
- (한계) 미시적 생활권 문제에 치중하여 광역권 발전전략 등 미흡, 지역일자리 위기 대응 소홀

2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치 재정립

☞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는 **분권, 포용, 혁신**

* 분권, 포용, 혁신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 체화되어 정책과제를 통해 구현

◇ (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) '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지방 자치 경험·자산 축적과 국민 참여욕구 증대

◇ (지역맞춤형 문제해결) 공간규모별 복잡·다양한 문제 증가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필요

분권

◇ (헌법적 가치 실현) 헌법 전문의 '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', 경제 부문의 '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', '지역간 균형있는 발전' 실현

◇ (지역간+지역내 균형발전) 낙후지역 배려, 지방소멸 대응,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(구도심 번성으로 원주민 이탈) 해결

포용

◇ (혁신역량 제고)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인재-특화산업-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

◇ (혁신성장)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희자원 (산림·해양·문화 등)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

혁신

3

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별성

- (국민주권시대 자치분권) 지특회계 운용시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,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제도 추진
- (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) 지역혁신체계 개편(지역혁신협의회-지역혁신지원단),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(신남방정책과 연계, 남북 균형발전 협력)
- (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) 지역산업 3대 혁신, 농림·산림·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산업클러스터 조성, 맞춤형 귀농귀촌
- (지역내 자원·인력 활용) 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체계 구축, 지역 유희자산 활용, 지역특화 도시재생, 웰니스(건강·치유)관광 클러스터 육성
- (참여정부의 창조적 계승)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(예산 편성·배분·조정시 의견제출권 강화), 혁신도시 시즌2(정주여건 개선, 성장 거점화)
- (낙후지역 배려)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고려한 지역간 차등지원, 인구감소지역 대응,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·복지체계
- 공간규모별 다차원적 정책목표 + 지역내 균형발전(도시재생 뉴딜)
 - ▷ [시도, 광역경제권] 경제·산업·일자리 균형
 - ▷ [시군구, 지역생활권] 교육·보건·복지·삶의 질 균형
 - ▷ [읍면동, 동네 마을] 자치역량 강화, 주민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육성
- (국민소통 강화) 균형발전상생회의 신설,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-지방-민간-주민간 역할 조정·중재

☞ 국가균형발전은 4대 복합·혁신과제*의 대안이자,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(경제·복지·사회통합 정책)

* 일자리, 4차 산업혁명, 인구절벽해소, 자치분권과 균형발전

☞ 위기극복과 시대적 흐름 대응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'지역주도의,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 패러다임'으로 전환

Ⅲ.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

<p>비전</p>	<p>지역이 강한 나라, 균형잡힌 대한민국</p>
<p>목표</p>	<p>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</p>
<p>3대 전략 / 9대 핵심 과제</p>	<p>1. [사람]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·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·복지체계 구축 <p>2. [공간]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<p>3. [산업]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
<p>실행력 제고 방안</p>	<p>【 법령 】 헌법,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혁신도시특별법 개정</p> <p>【 조직 】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, 지역혁신체계 구축</p> <p>【 예산 】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제도 본격 추진 ③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

IV. 전략별 주요과제

1. [사람]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

- ① **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** :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,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, 지역소재 학교지원 및 지역인재 취업지원
- ② **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** :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, 문화도시 지정 육성,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, 웰니스(건강·치유)관광클러스터 육성, 관광창업 지원
- ③ **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·복지체계 구축** :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,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및 모델 확산, 지역교통체계 개편

2. [공간]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

- ① **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** : '농촌 신활력 플러스' 사업 추진, '불편없는 농촌 '3·6·5 생활권' 구축, 맞춤형 귀농어·귀촌 정착 지원, 재생에너지 보급 등
- ② **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** :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(스마트 솔루션 접목), 공공상생상가 지원,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
- ③ **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** : 정주여건 개선, 지자체 연계협력으로 상생·협력 벨트 지정, 마을기업·공동체일자리사업 육성·확대

3. [산업]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

- ① **혁신도시 시즌2** : 지역인재 채용의무화,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, 지자체-대학-이전기관 협력클러스터 조성, 구도심 재생과 연계,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
- ② **지역산업 3대 혁신** : [산업] 중견기업지역스타기업 육성, 사회적 경제 육성 [거점] 국가 혁신클러스터, 산단, 새만금, 세종시, [기반] 인력·투자·Glocalization(세계화+지방화) 지원
- ③ **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** : 국유재산 총조사, 대부료 인하 등을 통해 국·공유 유희자산을 창업공간·임대주택 등으로 활용, 임산물 클러스터 등

전략1 [사람]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

1-① 지역인재-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

(교육부, 고용부, 농식품부, 과기부)

1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

-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(60%+ α)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질높은 지방대학 육성
* ('18년)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 선정 → ('19년) 일반 재정지원
-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 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*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
* 대학의 핵심기능인 ①산학협력(LINC), ②연구(BK)를 중심으로 사업 통폐합
-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*,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** 및 지역 선도대학*** 육성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
* ('18년) 2,212억원 / ** ('18년 신규) 10개 대학 100억원 / *** ('17년) 135억원→('18년) 160억원
-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강점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*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·개편('18.상)
* ('17년) 210억원, 18개교 → ('18년) 800억원, 모든 국립대 39개교로 확대

2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

-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* 선발 학과 및 인원 확대, 법령(「지방대육성법」) 개정을 통한 지방대 의약학 계열·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지역인재·저소득층 선발 의무화
* (지역인재 특별전형) : ('17년) 11,259명 → ('18년) 12,428명
- 우수한 지역인재 및 외국인 유학생을 지방대학에 유치·양성하고, 대학의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장학금 확대
*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유학생 유치 : ('17) 6,778명 → ('18) 7,500명

- 영농창업특성화과정*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 마련

* 미래농업선도고교('18년, 3개), 영농창업특성화대학('18년, 5개) → ('22년) 도별 1개

3 지역소재 학교지원

- 직업계고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*하기 위해,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및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는 지역소재 학교 지원

*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(3년지원) : 직업계고 150교에 총 210억원('18년)

- 혁신도시 소재의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내 초·중등학교 설립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* 신설

*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('18.3월 시행)

4 지역인재 취업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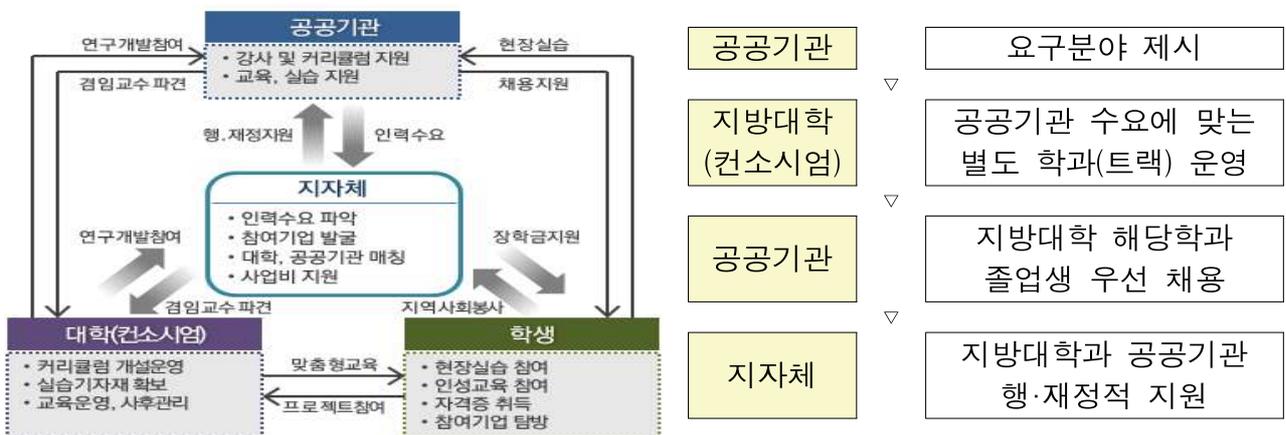
- 지역전략산업*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('18년 76억원)하고, 학생 연구원에 대한 현장 맞춤형 연구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지원

* (예) 전북 : 탄소 융복합, 대구 : 자율주행 자동차 등

-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('17년 14%→ '22년 30%) 정착 등 위한 지방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클러스터* 신설('18년~)

* (지방대학-지자체 연계 클러스터): ('18년 신규) 3~5개 컨소시엄, 50억원

< 지역대학-지자체-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운영 모형 >



1-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

(문체부, 국토부, 해수부, 농식품부)

1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

- '지역문화균형지수'를 개발하여(~'18년) 낙후지역에 문화시설을 우선 지원 하는('19년~) 등 지역 문화기반 확충
-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, 지역 문화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완화('18년~)
-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 분권 제도화('18년~),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('18년, 연 200여명)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 일자리 확대

2 새로운 가치창출로 지역문화 성장

- 문화예술·문화산업·역사전통 등 분야별 문화도시* 지정·활성화
* '18년 일부 시범도시 지정 → '22년 문화도시 30여개 선정
- 폐 산업시설, 도청 이전터 등 유휴공간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하고, 문화재·향교·서원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확대('18년~)

3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

- 역사, 문화, 생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광역 관광권을 개발하고,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
 - 3~4개 지자체를 연계한 핵심관광지* 대상, 권역연계 상품개발 (광역 시티투어 등) 및 관광기반 조성(통합 안내·홍보 등) 지원
- * [평창로드] 평창, 강릉, 속초, 정선 [자연치유] 단양, 제천, 충주, 영월 등 테마별 선정
- 국립관광도로 지정, 통영 폐조선소 부지 개발* 등을 통해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화, 섬진강 동서화합 문화예술벨트 조성
- * 경제거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

- 관광콘텐츠, 서비스, 인프라 등 개선으로 ‘관광전략 거점도시’ 육성
 - * 관광전략도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 부처의 관광 지원 사업 연계, 통합 지원

4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

- 농촌·산림·해양 자원을 활용한 건강과 치유의 관광지대 육성
 - 특색 있는 웰니스(건강·치유) 관광*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지, 숙박, 음식 등과 연계한 지역 체류형 ‘웰니스(건강·치유)관광 클러스터’ 선정·육성(18년~)
 - * 치료중심 의료관광에서 나아가 한방, 힐링·명상, 자연·숲치유, 뷰티·스파 등 포함
 - After-평창 프로젝트로 강원도 산과 바다, 특산물 등 자원을 기반으로 건강·명상·의료 등 고부가가치 관광의 시범모델 개발(18년~, 강원)
 - 농촌의 향토음식·경관·동식물·숲 등을 활용한 농촌 치유·힐링 관광을 확산하고, 치유의 숲 등 관련 인프라 확대
 - 해양치유자원, 해중경관, 해안누리길(53개 노선)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해양·관광 레저산업 육성
 - *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(17~19년), 해중경관 시범지구 지정(18년)

5 지역관광 혁신역량 제고

- 민·관·산·학 공동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관광 혁신체계 구축, 관광두레, 관광형 마을기업 등 관광 창업 지원
-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,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(18~19년 시범사업) 구축, 숙박·쇼핑 등 관광품질인증제 추진(숙박·쇼핑 → 음식 등으로 확대)
- 지역 연계 셔틀버스 운영, ‘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’ 제작,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* 출시 등 지역 관광의 접근성 제고
 - * (18년) 코리아투어카드 강원 출시, (19년) 코리아투어카드 남해안 출시 검토

1-③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·복지체계 구축

(복지부, 국토부, 행안부, 해수부, 농식품부)

1] 취약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

-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*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·지원 강화(컨설팅 등)

* 사회보장수준 하위 10% 미만 지역(재정자립, 자살·빈곤·저출산율 등 취약지역)

- 취약지역 중심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인프라·인력 등 확충을 위해 다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도입 추진('19년)
-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·운영 지원, 의료취약지(소아청소년과) 의료기관 등 지원 등 추진
 - 경영난을 겪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,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에는 당직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인력 파견

2] 지역중심 보건복지체계 구축

- 사회복지·방문간호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, 사회보장정보시스템*을 활용하여 읍·면·동 중심의 '찾아가는 보건·복지서비스' 확대

* 단전, 단수, 사회보험료 체납, 금융연체, 주거, 고용 위기 등 관련 연계 정보(27종)를 활용, 갑작스러운 실직·사고·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발굴·모니터링

- 사회서비스원*을 설립(시·도)하여 국공립 시설 직영을 통해 수립된 표준운영모델을 민간시설에 전파, 민간서비스 질 개선 견인

* (역할) ① 다양한 국공립 복지시설·공공센터 직접 운영, ② 국공립에서 수립된 표준 운영모델 및 표준화된 서비스의 민간 전파, ③ 시설 간 통합·연계 서비스 제공 등

- 보건소를 통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,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 자원(보건소 등)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

* 포괄적 관리계획, 교육·상담과 비대면 지속 관찰·관리 등 만성질환 관리 채널 다양화

-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위주로 대상자 단계적 확대,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강화
 - 농업인행복버스, 농·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건강검진 등 대학·농협·수협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
- * 행복버스('17년 30천명 → '22년 32천명), 무료건강검진('17년 48백명 → '22년 55백명)

3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
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* 등 활용,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
 - *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기획, 제공하는 서비스(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)
- 지역사회(시군구 단위)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 지원을 통해 통합적 사회서비스 사업모델* 개발 및 성공사례 확산
 - * (예) 강원도 원주의료사협 :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중 장애인의 욕구 사정, 일상생활 지원, 주치의와의 원활한 소통 지원을 담당하는 건강 코디네이터 육성
- 농·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귀농·귀촌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*
 - * (예) 전북에서는 여성 귀농·귀촌인들이 교육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설립·운영

4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

- 100원 택시(농촌형 교통모델) 전국 확대('18.1월~, 5천만원/시군), 벽오지 버스노선 조정 등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
 - 중앙선 등 주요 간선철도 속도향상(200km/h이상), 250km/h급 열차 투입 등 서비스 고속화('21년)로 고속철도 소외지역 철도서비스 개선
 -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운영비 지원을 통한 항로단절 예방, 노후선박의 신규선박으로의 조기 대체* 등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
- * 매년 7척+α, '22년까지 40척 건조지원

전략2 [공간]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

2-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

(농식품부, 복지부, 문체부, 교육부, 산업부, 해수부)

1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

- 특산물, 생태·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'농촌 신활력 플러스*' 사업 추진

* 일자리가 있는 농촌 신활력 거점 조성('18년 신규 10개소)

- 대학, 연구소, 기업체,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주체를 육성하고, 지역 순환경제, 생태문화, 특화산업 등 창의적 사업모델 개발

* (예)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다품목 소량 농산물(로컬푸드)을 직매장, 농가레스토랑, 공공급식 등 네트워크 허브를 활용해 주변 도시지역으로 공급

- 산업·문화 교육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지역과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방식 추진

2 불편없는 농촌 '3·6·5 생활권' 구축

- 중심지(읍소재지), 기초생활거점(면소재지),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없는 '3·6·5 생활권*' 구현

* (30분) 소매·보건·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/ (60분) 문화·교육·의료·창업 등 복합 서비스 / (5분) 응급벨,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

- 인접도시와 기능적 협업으로 촘촘한 서비스 공급망 구축

- 인구·시설집약도가 높은 읍 소재지에 공동시설 및 교육·문화·복지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집중한 중심거점 조성(~'22년까지 100개소)

- 면 소재지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·교육·간단 진료·보육 등 기초 서비스 공급거점 조성(~'22년까지 500개소)

- 무선방송·안전 가로등 등 ICT 기반 편의시설을 도입한 창의마을을 조성(~'22년까지 1,000개소)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도 병행

3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

- 농촌다움복원사업* 추진('18년~)으로 농촌의 가치를 발굴·보전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('19년~)을 통해 중장기적 농촌 발전방향 제시

* (사례) 역사·문학 탐방을 테마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'토지길'(하동군)

-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확대('17년 9개소 → '22년 20개소)하고, 지정대상 농업유산의 발굴·복원·환경정비를 지원

- 농촌과 도시 연계 확산을 위해 도시민의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 등 확충, 농촌체험마을 등 도시민의 농촌 체류 기회 활성화 추진

*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·단체 : '17년 76개 → '22년 200개

4 맞춤형 귀농어·귀촌 정착 지원

- 귀농귀촌 5개 유형(청년창업농·전직창업농·은퇴창업농·귀촌·취업농)과 4단계(탐색·준비·실행·정착)로 구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확대('18~)

- 청년 귀농인을 첨단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교육 및 현장실습형 '청년귀농 장기교육' 운영('18년~)

-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('17.12월)을 통한 원스톱 정보 제공, 지역 일자리 DB 구축('18.3월) 등 재능과 연계한 소득 창출 지원

-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인의 집*, 신규마을(10개지구/년) 조성 확대

* 지자체가 빈집을 수리하여, 귀농·귀촌 희망자가 거주지·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임시 거처로 임대('17년 총210개소 → '22년 총560개소)

- 영농정착자금 및 창업자금지원 등을 통한 청년 창업농 중점 육성*,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지구 조성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

*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 지원('18년 신규) 및 창업자금지원 우대,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신규 조성('18년 스마트팜 등 30개소) 등

-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('18년, 수협법 개정), 귀어학교 확충('18년, 3개소), 영어정착금* 지원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조성

*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 귀어 창업(예정)자를 선발, 월 1백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

5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

- '10대 어촌테마마을' 조성('18년 신규), 해녀어업, 뽕배어업 등 국가 중요어업유산(5개소)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
 - 동·서·남해 권역별 실태조사(~'18.10월)를 통해 어업유산 추가 발굴
- 어촌특화지원센터 전국 확산('18년 10개소 → '19년 12개소), 남해안권역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단지 구축(1개소, ~'20년, 추후 동·서해안권 확산)

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-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('18.상) 및 영농형 태양광 보급·확산 시범사업* 추진(8개 지자체, 40MW)
 - * 농업인(영농조합법인) 컨소시엄 대상 금융지원 및 R&D 지원 → 우수모델 전국 확산
 - 태양광설비(100kW 미만)에 한국형 FIT 제도*를 5년간 한시적용하고,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 강화
 - *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 < 기준가격인 경우, 차액을 보상하여 중장기 안정적 수익 보장
-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('18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)을 통해 지역 수용성·환경성 사전 확보 및 발전부지 적기 공급 추진

【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(안) 】



- 태양광 소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허브로서 지역의 제조 기반과 R&D센터, 산업단지, 대학 등을 연계하여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
- 5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('20년) 등 풍력 클러스터 구축
- 조류발전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, 자원량이 풍부하고 배후 항만·공업 단지가 조성된 전남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조류발전 R&D 추진
 - *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설치('11년),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(~'21년)

2-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

(국토부, 문체부, 중기부)

1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

-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조성(문화재생), 한옥 등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재생 등을 통해 특화된 재생 유도
-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(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)을 조성하고, '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(도첨산단 등 활용)' 지정
- 쇠퇴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, 교통, 문화 등 스마트 솔루션*을 접목하여 주민 생활편의 향상
 - * 복지(헬스케어), 교통(스마트 주차), 문화(VR 관광정보), 주거(스마트홈), 안전(지능형 CCTV) 등
-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·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및 저리 기금 융자* 실시
 - * 총사업비의 50%까지 연간 1.5%이하의 금리로 융자실시 및 보증상품 제공
-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보강, 지역사회 복원 등 종합지원 착수
 - *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('18.4)하여 포함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

2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, 상생

- 주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임(대상사업 중 2/3 수준을 지자체 자체 선정)
- 주체별·사업단계별 교육 및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한 실천형 교육을 시행하고, 우수 교육프로그램 확산('18.3월)
 -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 수요파악 및 계획을 수립·추진하는 '주민참여 컨설팅단'(공간, 지역공동체, 서비스디자인, 청년창업 등) 운영
 -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,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착수

- 현황조사 내실화, 종합계획 수립, 분쟁조정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(現 5년)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

* 국토부·법무부 공동 정책협의회에서 논의(「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」 개정 사항)

- 임대인·임차인·지자체의 자발적 협력 유도를 위해 뉴딜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**상생협약 체결 활성화**(17.12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)
- 기금 용자 등을 통해 기존 상인,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(가칭 '공공상생상가') 조성 지원

3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

-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'(가칭)뉴딜 로드맵'을 마련,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
- 변화한 지역여건, 포용성·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 등을 반영하여 「도시재생특별법」도 개정(쇠퇴기준 정비, 주민제안사업 도입 등)
-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주택 개량, 상가 리모델링, 산단 재생 등 도시재생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
4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

- 지역에 살더라도 인근에서 종합병원 등 고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·서비스를 고유하는 **자족적 도시권*** 구축
- * 3~5개 도시를 연계하여 고차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배후인구(30만명 내외) 확보
-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고차서비스 시설(예: 종합의료원)을 공급하고, 주변도시에는 기초서비스 시설 공급
 -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간 대중교통망 구축, 순회서비스 제공,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
- 선도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제도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(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후 '18년부터 착수)

2-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

(행안부, 농식품부, 국토부, 기재부 등)

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법·제도 개선

-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에 지자체별 인구감소 대책 포함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 검토
- 인구 추이·구조, 소득, 재정 지표*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인구 감소 대응방안 마련
 - * 인구증감률, 노령인구비율, 생산가능인구비율, 여성인구비율, 1인당 주민세, 재정자립도 등
-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부처 사업 Pool 구성,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패키지 신청, 지역위 조정을 통해 우선 선정
-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(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지역 등) 재정비, 사업 다각화 등 지원 실효성 제고 추진(연구용역 실시 예정)

⇒ 기재부, 행안부, 국토부,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TF 구성을 통해 현황 분석 및 종합 추진방안 별도 마련 예정

2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

- 인구 급감 지자체에 생활 인프라·편의시설 조성,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
 - '18년 10개, '19년 10개 등 '22년까지 총 50개 지역 지원
 - * 지자체·주민 주도의 사업 기획 →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→ 행·재정적 지원
- 전국 어디서든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정 시설 배치·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 확대
 - 마을, 읍·면, 시·군 단위의 계층별 필수시설 입지 표준모델을 설정하고, 생활편의 인프라 조성 또는 재배치
- 스마트 타운, 생애주기별 특화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 조성 지원,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 골목상권·소상공인 지원 확대

3 균형발전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한 「상생·협력 벨트」 지정

- 지자체간 연계·협력을 통한 자생적 발전을 위해 ‘상생·협력 벨트’를 지정하고, 획기적 권한이양, 규제 완화 및 행·재정적 지원
- (1단계 : 지자체 연계·협력 강화) 지자체 간 공공서비스·시설 공동 공급 및 활용 촉진, 특화사업 공동 기획·추진
 - 행정협의회 활성화, 지자체간 협약제도 도입, 광역연합(특별지방자치단체) 도입으로 연계·협력 기반 마련
 - 지특회계, 지역상생발전기금(지자체),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등 활용 지원
- (2단계 : 상생·협력 벨트 운영) 지자체간 연계 권역을 상생·협력 벨트로 지정, 포괄적 지역개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 지원
- (3단계 : 자립 성장거점) 분권 선도모델 적용을 통한 연쇄적 성장 거점 마련, 지자체간 연대 네트워크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

구분	[1단계]	[2단계]	[3단계]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간 연계·협력 - 공공서비스 공동 공급 - 공동 사업 기획·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생협력 벨트 지정 - 규제 대폭 완화 등 - 지역개발 권한 포괄 이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립 성장거점 - 분권 선도모델 적용 - 연쇄적 거점·권역 조성
지원 (예시)	√ 상생기금, 지특회계 지원	√ 투자심사 면제 등	√ 재정·조직 특례, 통합 지원

4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역량강화 및 활력 촉진

- 「마을공동체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, 중앙부처 공동체 지원사업*에 대한 분석·진단(연구용역)을 거쳐 지원 체계 효율화

* 현재 7개 부처에서 20여개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중

- 마을기업 육성 확대(~'22년, +500개) 및 판로 지원, 저소득층 대상 공동체일자리사업 확대(~'22년, +5만명),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
- 청년희망뿌리단, 농촌활력지원단 등 청년층 창업·귀농 지원 사업을 통해, 인구감소지역 정착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도모

*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: 지원받은 청년 활동가 중 60%가 농촌 등 해당 지역에 정착

전략3 [산업]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

3-① 혁신도시 시즌2

(국토부, 교육부, 산업부, 중기부, 문체부, 농식품부)

1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

-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
 - * '17년 14%, '18년 18%, '20년 24%, '22년 30%로 단계적으로 확대
- 이전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기업집적 활성화를 도모하고,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대학교 입주 규제 완화*
 - * 교사(교육기본시설, 연구시설), 교지 등에 대한 설치특례를 '클러스터 부지'에 적용
- 이전기관별로 지역발전 기여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, 이전지역 재화·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, 지역대학과 교육과정 개설(오픈캠퍼스)
 - * '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(부산), 감정원(대구), 한국전력(광주·전남) 등 9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

2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

-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려 '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' 조성
 - * 나주 스마트 에너지(한전), 김천 스마트교통(도공, 교통안전공단) 등
- 교육·의료·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, 스마트한 대중교통 연계 체계 구축* 등 미래교통 모범도시로 육성
 - * BIS(Bus Information System) 구축확대, 수요 응답형 버스(수요에 따른 운행) 도입 등

3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

-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
 - * 판교 기업지원 모델(연계기업 협력, 업무공간 임대)을 혁신도시별 여건에 맞게 확산

-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요거점을 연계,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대학캠퍼스, 기업 연구소를 이전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확대

* 산학융합지구 확대 조성 : ('17년) 6개 조성(7개 조성 중) → ('22년) 15개 조성

- 시·도 주력산업을 혁신클러스터 실증프로젝트와 연계하고, 투자선도지구·도시첨단산단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기업유치 활성화

* 예시 : (충북) 태양광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개발·확산
(강원) 의료기기 산업기반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프로젝트 추진

4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

- 지자체-지역대학-이전기관 협력클러스터* 조성, 이전기관 맞춤형 연계전공 개설을 추진하고,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비중도 확대

* 지자체 연계 컨소시엄(2~3개, 50억원)을 통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

- 구도심 재생 연계*, 인근 구도심 문화 콘텐츠 접목, 로컬푸드 직거래 및 주변 농산어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생활권 내 균형 도모

* 김천·나주의 기존 도심재생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(나주 역전마을 등) 확대추진

5 추진체계 재정비

- 시·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(혁신도시별 발전테마)을 수립하고,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 마련

* 혁신도시 발전전략,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,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등

-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조직 정비, 혁신도시별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혁특회제도 내실화

* 공공기관이전추진단→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개편(국토부), 산업부·교육부와도 협업

3-② 지역산업 3대 혁신

(산업부, 국토부, 중기부)

1 (산업 혁신)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견인

-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중견기업* 50개 선정 및 집중 육성

- * 지역 소재 중견기업 중 혁신역량(R&D, 수출 등), 지역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기여도 등 고려 선정
- 대학·출연연·중소기업 등 공동 R&D 및 수출·마케팅·인력 등 패키지 지원

[중견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]



- 지자체가 선정·육성하는 주력산업 기반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을 위해 R&D, 사업화 등 프로그램을 정부가 연계 지원
-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간 협동 방식으로 6대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 14개 협력 프로젝트 지원

[바이오헬스]	[스마트환경산업]	[에너지신산업]	[전기·자율차]	[첨단신소재]	[프리미엄소비재]

-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재설계*, 메이커 스페이스의 전국적 확충('18년 65개소) 등 지역의 혁신창업 허브 역할 강화

* 창업기업 보육·투자기능 강화, '혁신창업 아카데미' 운영 등

-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「사회적 경제 5대 분야 50개 프로젝트」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기술혁신·사업화 지원

* 5대 분야 : 제조·유통, 에너지, IT문화, 사회서비스, 식품제조

- 지역 내 각종 서비스사업자들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서비스 「Redesign 프로젝트」 추진

* 지역디자인센터 등 거점기관을 통해 교육, 컨설팅, 커뮤니티, 홍보·확산 지원

② (거점 혁신) 혁신성장 4대 거점 육성

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新성장거점으로서, 혁신도시 중심 경자구역, R&D 특구, 대학 등 주변 거점을 연계한 「국가혁신클러스터」 육성

* 예시 : 원주혁신도시+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+동화산단+연세대(원주)

- 보조금·세제·금융·규제특례·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와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「지역 중핵기업」 150개사 유치
- 「(가칭)지역혁신성장특구」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산업의 대표 테스트베드로 육성

② 산업단지를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

- ①창업+②제조혁신+③우수한 문화·주거·편의시설 등 종합적 혁신지원을 통한 「청년친화형 산업단지 20 전략」 추진

* '18년 시범산단 3곳 선정, '22년까지 수요·재정여건 등을 감안 20개 내외로 확대 검토

- 판교 제2밸리의 기업성장센터 등 공공임대창업공간 확대, 범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성장 선도모델 구축·확산

*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단(11개소), 특화산업 국가산단 등에 판교형 공공민간 지원시스템 확산

-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개발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「지역혁신 국가산업단지」 조성 추진

③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

- 행정안전부, 과기정통부 등의 차질없는 이전을 추진하고, 국회 분원 설치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병행 추진

- 「행복도시법」 개정*에 따라 이전고시(행안부) 등 선행절차를 조속 추진하고,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청사 건설 및 입주 추진

*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삭제 등('17년 10.24일 공포)

- 국회방침이 결정되면 국회분원 신속건립 지원 (건립부지 반영 등)
- 국제기구 유치 및 시민단체(NGO)의 정책 참여·소통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
- 첨단산업·대학 유치, 스마트시티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,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마련
- 산학연 클러스터, 공동캠퍼스 등을 조성, 첨단산업과 대학* 유치
- * 개별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,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국립행정대학원(지역공약) 등 소규모 입주를 지원
- 국내 최초로 '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' 조성 추진 (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타운 조성, '19년까지 설계완료)
- 대전·대덕특구·오송 등 인근 지역의 자원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 마련

4 새만금 개발활성화를 위해 공공 선도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재생 에너지·관광레저사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

* 예시 :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정부가 우선 매립하고, 향후 복합관광단지로 활용

- 새만금개발공사 설립('18년)으로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 매립·조성
- 고속도로, 십(十)자형 간선도로 및 항만·공항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, 재생에너지, 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

3 (기반 혁신) 인력·투자·마케팅 등 스마트 지원프로그램 가동

- 지역 거점대학을 활용한 지역에 머무는 우수인재 양성
 - 우수인력·연구자산·도심입지 등을 갖춘 지역거점대학에 산학융합지구*를 조성하여, 산학협력과 대학의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
 - * 대학 내 기업연구관, Post-BI 센터 등을 유치하여 산학 공동R&D-인력양성-취업 연계
 - * 강원대·충남대 등 지역 거점 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
 - 창업기업 성장공간 제공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지원
- 외국인 투자,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일자리창출·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
 -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자구역·외투자지역 등의 국내외기업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고, 지방투자 지원 강화
- 지역기업의 「Glocalization(세계화+지방화) 전략」 추진
 - 지역기업 대상 현지 맞춤형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고, KOTRA 지방지원단의 수출지원, TASK* 등 기술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
 - *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(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) : 프로젝트 수주, 해외거점 확보, 개량·보급, 기술지도
 - 국내 지역과 글로벌 국가(기관·기업) 간 공동R&D, 인력양성 등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
 - * 예시 : (울산-美샌디에이고) 자율주행차 분야 산학 주체들간 연계

3-③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

(기재부, 행안부, 문체부, 국토부, 중기부, 농식품부, 해수부)

1 지역내 유휴 국유재산 발굴을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

- 국유지는 전국에 고르게 산재되어 있어 도시재생 및 지역별로 추진되는 전략적 新산업을 위한 입지로 활용 가능

* '16년 1,0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(1,044조원)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.7%(467조원), 전 국토의 1/4 수준(24.9%)

** 여유 공간이 부족한 舊도심지에 노후 청사부지, 항만 軍 부대 등 유휴 국유지 다수 분포

- 국유 행정재산*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·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* '11~'12년 3.1만 필지를 조사하여 '13~'16년간 연평균 대부수입 9.4억원 증대
→ 총 조사대상(217만 필지)으로 확대하면 약 658억원 기대(=9.4억원×70배)

2 국유지 토지개발·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-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건축행위로 한정된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*까지 확대(건축 → 건축 + 토지개발)

* 절토, 성토, 구획정리, 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

- 복합 개발 건물 內 일정부분을 벤처·창업 기업 입주 공간 및 청년·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

* 복합개발 선도사업 19건(국유지 8건) 선정('17.9월) / 임대주택 1,130호 계획

- 공유재산도 공유지 임대 등 일반적 사용 외에 민간위탁 개발을 도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지원

* 예시: (대구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성, (광주) 광통신 개발업체 유치 등

3 지역내 국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부제도 개선

- 대부요율 다양화* 및 대부료 탄력적용** 등을 통해 국유지 활용도 제고 및 농림·어업·축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

* (현행) 경작용 1%, 주거용 2%, 일반용 5%, (개선) 축사용, 어업용 3% 등 신설

** 부정형·경사·맹지 등 형상불량 및 극소규모 토지, 시설보수 필요 건물 등 활용 조건이 열악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허용

- 수목조림(10→20년), 시설보수 필요건물(5→10년) 대부기간을 연장하고, 일시·계절적 수요*에 따른 단기대부 허용

* (예) 명절, 황금연휴 해수욕장·산림욕장, 각종 지역축제 행사장 주변 국유지 등

4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

- 산촌거점권역* 선정 및 유형별 산촌특구(정주/산업/서비스특구) 사업 추진,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

* 거점권역: 산림과 산림자원의 순환·이용 및 이와 연계한 지역자원의 활용 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선정한 시·군

* 산촌거점권역 선정·육성 : ('18년) 5개 → ('22년) 총 30개

- 임산물*, 국산 목재를 활용, 생산·가공·유통·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조성(예시 : 제주 고로쇠 산림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 등)

* '17년말 4개소(보은(대추), 부여(밤), 영동(뽕은감), 함양(산양삼)) → '22년 14개소

5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·도서지역 재창조

- 노후·유휴화된 부산북항, 인천항,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 주변지역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

-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집적·융복합시켜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·운영

* 부산항 및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('18.1월), 기반시설 조성('18.10월~'19년)

- 낙후된 소규모 어항·포구 중 선도 투자 대상 300개를 선정한 후 재창조하는 「어촌뉴딜 300」 사업* 추진방안 마련('18.상) 및 단계별 현대화

* 여객선 기항지 정비, 해양재난사고 대응, 어촌마을 재생, 어촌관광수요 창출

V. 실행력 제고방안

법령

헌법, 국가균형발전특별법, 혁신도시특별법 개정

1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

- 개헌시 헌법 전문, 경제부문* 등 규정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 강화, 균형발전 방향 구체화 등 반영 검토

* 제123조 : '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육성 의무'

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

- (명칭 복원) 헌법적 가치 및 100대 국정과제*,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및 정의 관련 규정 개정, 국가균형발전 개념 복원

* (78)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

- (위상강화) 위원회가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, 제출한 의견의 효력을 강화*

* (현행) 기재부 장관은 ~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⇒ (개정)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~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·배분

- (지역혁신체계 구축) 시민단체·대학·기업 및 과학·산업기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,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제고
- (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·육성)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혁신도시와 인근 산단·특구 등을 묶어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, 활성화 지원
- (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도입) 시·도와 관계부처가 계획내용·재원배분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,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 지원
- (균형발전 시책 추가) 국가균형발전 정책 국제교류 협력, 지방대학의 발전, 혁신도시의 활성화, 지역통계 기반 구축 등

3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

- (종합발전계획) 국가차원의 혁신도시 발전전략·계획 수립근거 마련
 - * 시·도지사의 혁신도시별 계획을 기초로 종합발전계획 수립
- (지역발전 기여)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추진계획 수립·시행을 의무화
 - *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규정
- (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) 혁신도시 발전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‘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*’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 - * 시·도지사는 창업 등 혁신활동, 지역 특화발전 전략 마련, 지역인재 양성,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치 가능
- (추진체계)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,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목적·역할 변경

조 직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, 지역혁신체계 구축

1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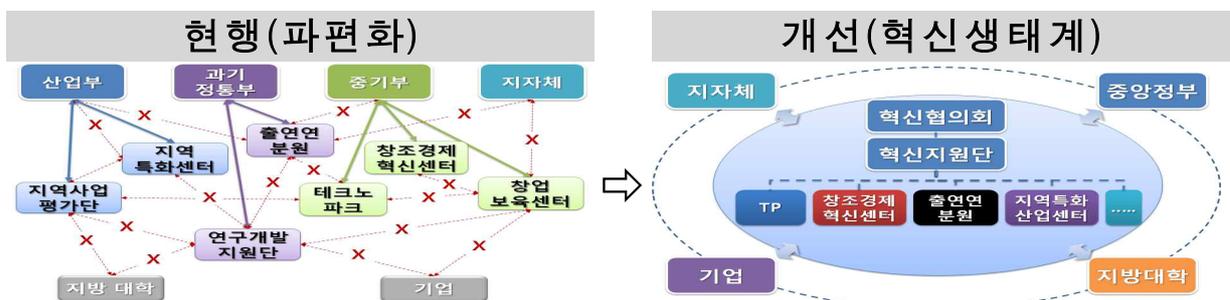
- 현장 의견수렴 및 중앙-지방 협력을 위한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 ‘균형발전 상생회의’를 제도화하여, 자립적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
- 중앙-지방(지역혁신협의회) 주요 혁신 주체가 참여하여,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, 정책성과 점검 및 확산
 - * 국책연구원, 시도연구원과의 연계·협력, 일본·중국 등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

<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 >



2 지역혁신체계 구축

- 시·도별 '지역혁신협의회-지역혁신지원단'의 지역 혁신체계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주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
 - (지역혁신협의회) 시·도 발전계획,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, 지역 혁신체계 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기구
 - (지역혁신지원단)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
- ⇒ 대학, 연구기관, 과학기술·산업지원 관련기관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지역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상시 조정 플랫폼 역할 수행



- 지역 R&D 과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(과기정통부) 및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와 연계하여 사전심의 및 예산 과정에 의견 제시
 -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간사위원회에 지역위 총괄국장을 공동 위촉하여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R&D 정책 조정기능 강화
- 지역혁신협의회,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제도 운영 등 지역 혁신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'(가칭)지역혁신지원센터' 지정·운영

3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

- (한-중-일-유럽 지역정책 공조체계 구축) 인구감소, 저출산-고령화, 수도권 집중 등 공통된 국가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와 지역정책 협력
 - 지역정책 총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력 추진
 - * (한) 지역발전위원회 (일) 내각부 지역·사람·일자리 창생본부 (중국) 내각성 (프랑스) CGET
 - * '17.12월 한-일 총괄기관간 협력각서 체결(관계장관회의 정례회, 실무협의체 구성, 인적교류 등)
- (신남방정책* 활용) 아세안, 인도 등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 구축, 아세안**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
 - * 국정과제 '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'을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과 연계
 - **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외국인투자, 내수시장, 제조업 기반시설 보유국 우선협력
- (남북 균형발전 협력)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역의 위상과 역할 강화, 지자체의 문화·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남북협력* 추진
 - * 강원 DMZ협력, 경기 말라리아 방제사업, 경남 통일딸기, 제주 감귤보내기 등

4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 시행

-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위(균형위) 간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협업 강화
- 지역 기반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·4차 산업혁명·저출산 등 과제는 필요시 현안별 위원회 합동보고 추진

예산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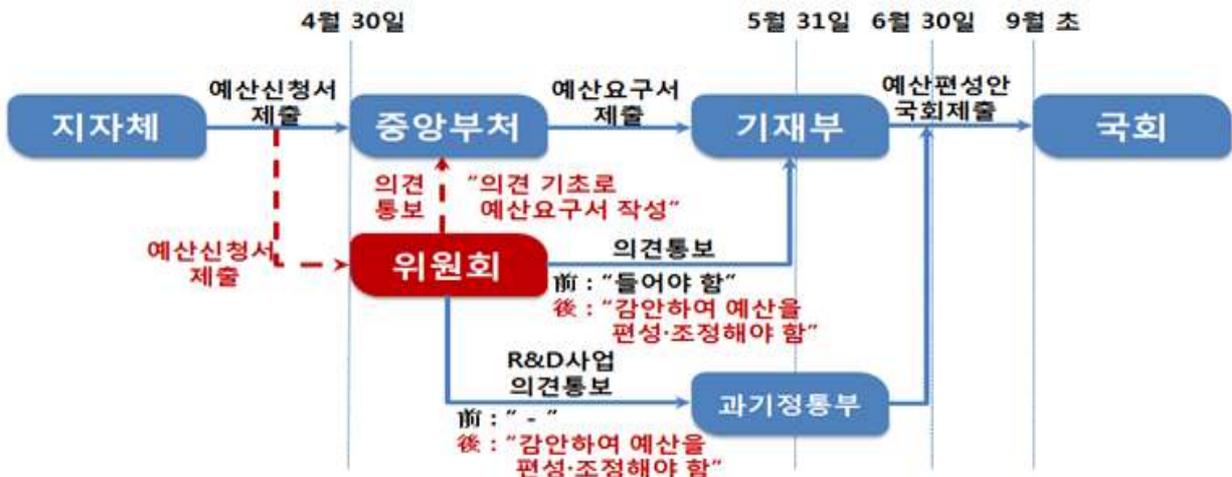
1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시 지자체 자율성 제고

- 지난 10년간 10조원 수준으로 동결된 지특회계 규모를 지방재정 분권 강화방안*과 연계하여 필요시 규모 조정 검토
 - * 현재 중앙정부 업무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종합검토 중
- 포괄보조사업(생활기반계정)의 보조율 상향 조정
 - 인구가 적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균형발전 수요가 높음을 감안하여 보조율 차등화 적극 시행
-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계정체계 변경 (생활→지역자율, 경제→지역지원)

2 예산 편성·배분·조정 시 지역발전위원회 의견 제출권 강화

- 기재부, 과기부 등이 예산 편성, 조정·배분 시 지역발전위의 의견을 감안해야 할 의무를 균특법에 반영

< 예산 절차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제출 흐름도 >



예산②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제도 본격 추진

- 현행 지역사업은 부처별 칸막이 식으로 기획되고 단년도·일회성 위주로 지원되어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 추진에 한계
 -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*하는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도입 추진
 - * 지역위를 창구로 다양한 사업을 조합,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
- ▶ [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특성] 지역별 공정배분, 포괄보조, 다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

<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제도 운영체계 >



< 세부방안 >

- (1단계: 도입) 균특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과 병행, '비전과 전략'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계약(포괄지원협약) 시범사업 선정·추진('18년~)
 - * 시범사업 대상(예시): 강소도시권 육성, 산단 구조고도화, 해안권 연계협력,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
- (2단계: 확산)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점진적 확대
 - *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발굴, 지역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

예산③

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

1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

- 지역의 발전정도, 잠재역량,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등 지역 여건의 종합 진단을 통한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제고
 - 해당지역의 특정 지표 취약시 각 부처와 연계하여 지역정책 환류
- 지역발전정책 사업 평가·환류의 과학적 접근 도구로서 객관(정량) 지표와 체감(정성)지표로 구성('18년 지표개발)
- * 지역은 삶터이자, 일터이며, 쉼터이고, 공동체의 터라는 전제 : (삶터) 정주 환경 / (일터) 경제적 기회와 소득수준 / (쉼터) 자연환경 / (공동체의 터) 공동체적 유대 및 참여기회

< 균형발전총괄지표 구성(안) >



- 지역발전위원회 내 국책연구기관 중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지표체계 확정, 매년 자료 수집 및 조사 측정
-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부처가 낙후도, 문화균형, 사회보장, 생활인프라(National Minimum) 등 특정부문 지표 개발시 연계 및 통합관리

2 지역차등지원

- 지역간 삶의 질, 주민행복 정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총괄지표에 근거하여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, 차등 자원배분·감면방안 마련

VI. 향후 추진일정

-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'18.2월 목표)
- 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* 수립지침 작성 및 지역위 의결 ('18.2월)
 - *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장(4조~9조)에 근거하여 작성
 -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작성(각 부처 및 시·도에 송부)
 - < 계획 수립지침 포함사항 >
 - 지역주도 참여형 계획 수립 추진체계
 - 5개년계획의 편제 및 편제별 담당부처·협조부처
 -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범위 및 세부 목차(안)
- ③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부문별 및 시·도 계획안 마련 및 지역 순회 공청회 ('18.4~6월)
- ④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공포 ('18.7월)
-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* ('18.10월)
 - *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상정·의결, 대통령 재가
- ⑥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·발표 ('18.10월)
- ⑦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 수립 ('19년~)